

韓지지층 본격 세 과시... '친윤' 정점식 사퇴 공세

(정책위의장)

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 PK(부산·울산·경남) 재선 서범수 의원을 낙점했다. 한 대표 강성 지지층이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댓글폭탄을 던진 가운데 정 의원도 정 의장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. 그러나 정 의장에 대한 압박은 친한계의 당 장악에 앞서 한 대표 여론조성팀(댓글팀) 의혹에 한층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다.

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무총장 인선을 발표했다. 그는 “변화에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분을 널리 찾았다”며 “울산(울주가 지역구인) 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”고 밝혔다.

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“사무처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고 새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(해달라는 한 대표의) 당부가 있었다”고 전했다. 특히 정 의장을 겨냥해 “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임면권은 대표가 갖는다. (의장) 임기가 1년2년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”고 주장했다.

9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윤 4명·친한 3명의 구도다.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가 임명되면 지도부 내 친윤·친한 비율은 4대 4가 된다. 이 힘의 구도를 무너뜨릴 자리는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의장이다.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정 의장

정책위의장 유임 땀 당 지도부 4대3 구도로 친윤 우세
신임 사무총장 서범수 “임기 무의미... 鄭의장 물러나야”
韓 강성지지층 鄭의장 폐북 테러... “한딸이나” 논란



한동훈(가운데) 국민의힘 대표, 추경호(왼쪽) 원내대표, 정점식(오른쪽)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박미나 선임기자

이 유임되면 친윤계는 당 지도부에서 상당한 입김을 발휘할 수 있다. 반면 친한계 인사가 새로 임명되면 친한계는 ‘한동훈 일극체제’ 발판을 다질 수 있다.

때문에 친윤·친한계는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. 서 의원 등 친한계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‘물갈이’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. 반면

친윤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정책위의장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. 취임한지 두 달 남짓 된 정 의장은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.

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“(당대표) 당직 임면권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직에 대해 임면권이 있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. 상임 전국위원회에

가서 당헌을 해석하는 게 맞다”고 했다.

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 교체 시도가 한 대표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 대통령실·원내대표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음은 물론 한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집단행동 앞에 한 대표가 당 안팎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. 한 대표 강성 지지층이 정 의장 페이스북에 몰려가 “사퇴하라”는 댓글을 무더기로 달면서 정 의장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건이 최근 벌어진 바 있다.

김 최고는 “요즘 ‘한딸(한동훈 지지층+개딸)’이란 말이 유행하는데 그 (한딸) 중 지도급에 있는 분이 원래 우리 당 지지자는 아닌 걸로 안다.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보수우파나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여준 여러 모습과 조금 다르다”고 지적했다. 정지권에는 한 대표 강성 지지층 상당수가 옛 문과(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) 출신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. 이상휘 의원은 “일종의 팬덤현상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”이라고 했다.

더불어민주당에선 ‘특검’이 재차 언급됐다. 박지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서 “한동훈 댓글팀 ‘가말(가발의 딸)’들이 정 의장을 물러나라고 공격했다. 김건희·한동훈 댓글팀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”고 했다. 조국혁신당은 최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. 한 대표는 ‘문과’ 연루·댓글 팀 운용 의혹을 부인 중이다.

오주환 기자jhoh@skyedaily.com



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소동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‘법인카드’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대전MBC 등의 현장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. 연합뉴스

‘빵문회’ 된 이진숙 청문회

野 ‘李 빵 구매 의혹’ 치중
尹 대통령, 임명 강행 전망

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‘빵문회’라는 비아냥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. 당정은 공식인 방통위 부위원장 인선·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소 등 대야(對野) 협공에 나섰다.

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 없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. 대통령실은 원활한 방통위 가동을 위해 공석인 부위원장 인선에도 돌입했다.

이날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야당 탄핵 공세 앞에 26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현재 방통위는 초유의 ‘0인 체제’다. 이전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. 김 부위원장은 판사 재직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을 반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등을 막아선 인물이다.

김 부위원장 외에 후보군 명단에 오른 이들도 모두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. 대통령실은 언론인 출신인 이 후보자를 보좌해 신임 부위원장이 방송·통신 관련 법률 사안을 다루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.

대통령실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배경엔 생산적 공방은 없었고 오로지 ‘빵’ ‘법카(법인카드)’란 난무한 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사흘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대신 대전MBC 사장 시절 빵 구매 등 법인카드 결제 의혹 규명에만 치중했다.

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에는 대전MBC 인근의 한 제과점에 몰려가 이 후보자 빵 구매 의혹을 검증한다며 24만 원어치의 빵을 쓸어 담았다. 이 후보자는 대전MBC 근무 마지막 날 해당 제과점에서 53만 원어치의 빵을 혼자 구매 직원들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. 28일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‘현장 검증 결과’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. 이들은 “이 후보자가 혼자 들고 가져갈 수 있던 빵을 직접 샀다. 24만 원어치조차 최소 세 명이 붙어야 들 수 있는 양”이라고 했다. 이에 미디어정책 총괄 행정 기구 수장 청문회가 ‘빵문회’가 됐다

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.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위원장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. 최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게 “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”고 주장한 바 있다. 윤리위 제소에 민주당은 반발했다. 민주당은 내달 2일 이 후보자를 과방위에 재차 소환해 질의 공세를 잇는다는 방침이다.

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위원장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. 최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게 “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”고 주장한 바 있다. 윤리위 제소에 민주당은 반발했다. 민주당은 내달 2일 이 후보자를 과방위에 재차 소환해 질의 공세를 잇는다는 방침이다.

오주환 기자jhoh@skyedaily.com

오주환 기자jhoh@skyedaily.com

만평 화필살인(畫筆殺人)



일극체제 반론 나선 이재명... ‘댓글 달기’ 독려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.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90% 이상 누적득표율을 이어가고 이 후보 러닝메이트 격인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도 선두를 바짝 추격했다. 이 후보는 일극체제 비판 반론 과정에서 ‘댓글 달기’를 독려했다.

29일 정치권에 의하면 이 후보는 28일 충남·충북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결과 누적득표율 90.41%를 기록했다. 김두관 후보는 8.36%·김지수 후보는 1.23%였다.

최고위원 선거에선 김민석 후보가 선두와의 격차를 좁혔다. 28일까지 김민석 후보 누적득표율은 17.16%였다. 1위인 정봉

주(19.03%) 후보와의 격차는 1.87%p까지 좁혀졌다. 이 후보는 20일 경선 직후 “김민석 후보 표가 왜 이리 안 나오냐”고 지적한 바 있다.

이에 이 후보가 수석(1위)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후보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지지층 사이에 퍼졌다. 이후 김민석 후보에게 물표가 쏟아졌다.

이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“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한다. 힘이 남으면 댓글이라도 하나 더 쓰고 동네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이 나라가 어찌 가야 하는지 토론하자”고 말했다.

오주환 기자jhoh@skyedaily.com

근로복지공단

보상, 요양, 재활까지! 일하는 사람 모두!

산재보상 올라잇!



신속! 공정!

01

산재보상

- 출퇴근재해보상
- 업무상질병보상
- 보령급여지급

빠른 쾌유를 돕는!

02

요양서비스

- 요양지원(치료)
- 재요양·추가상병
- 공단병원 운영

안정적인 일터복귀!

03

재활서비스

- 의료재활
- 심리재활
- 직업재활